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의미와 그 올바른 방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진정으로 의미있는 조직이 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과 민주화운동 정신의 생환(生還)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학과 교수, 사회학)

독립과 민주주의라는 두 가치

나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고히 간직하여야 할 두가지 민족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첫째 독립과 자주이고 둘째 민주주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식민주의에 반대하면서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며 쓰러져 간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버티는 하나의 정신적 버팀목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바치며 쓰러져 간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버티는 또하나의 정신적 버팀목이다. 독립을 향한 정신을 기리고 그것을 차세대에게 전승하는 과정은 이미 국가적 작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민주주의를 향한 정신을 기리고 차세대에게 전승하는 일이다. 60 · 70년대 민주주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독재에 신음하던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타는 목마름으로' 소망했고 마침내 80년대에 이르면서 민주주의는 이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군부정권에게 퇴진을 명령하고 이후 한국사회를 민주주의사회를 향한 대장정에 오르게 만든 사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정신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민주주의는 우리의 제도 · 구조 · 문화 · 의식 속에 깊히 뿌리내리지 못했으며 반민주적 세력과 의식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박정희 신드롬' 이나 박정희 기념관 건립 시도 등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말하여 준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존재하고 있다. 80대 시대정신이 된 민주주의를 독립정신에 준하는 가치가 되도록 만들고 그것을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차세대에게 전승하는 과제를 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출범했다고 생각된다. 온민족이 광복절을 통해 그 독립정신을 기리고 독립기념관을 통해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불굴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기리고 그 불굴의 정신을

차세대에게 전승하여야 할 과제 앞에 서 있고 그 제도적 소임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이제 다시 독재와 권위주의 망령이 이 땅에 되살아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민주화투쟁을 정사(正史) 속에 위치지우는 과정이다. 다시 독재와 권위주의가 부활한다면 '민주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선열 보다 더 영웅적인 민주화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자세와 결의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과거의 것이 아니다. " '과거' 를 소재로 한 '미래' 를 향한 '현재' 적 투쟁", 이것이 바로 '기억투쟁' 의 의의라고 할 것이다

기억투쟁과 민주화운동의 현재화 · 미래화

이러한 기념사업은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전승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세대에게 있어 그것은 생생한 체험이지만 후세대에게 그것은 역사라고 할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의 암울했던 과거, 영웅적인 과거를 현재로 만드는 것이 기념사업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념사업의 과정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공식적 '기억' 으로부터 배제당하였던 영웅적인 투쟁의 기억과 희생의 기억을 되살리고 전승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이 기억의 전승에 있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단순히 존재했던 '기억' 의 전달자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점에서 기억 '투쟁' 의 과업이 맡겨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끝나버린 과거의 체험을 단순히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기억을 어떤 형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 기억을 소생시키고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구세력의 제도적 · 비제도적 · 의식적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억을 둘러싼 투쟁은 단순히 과거의 투쟁이 아니라 현재적 투쟁이 된다.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독재와 그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역사' 에 기록하며 그 시대를 살지않은 세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하는 '미래의 세대를 향한' 현재적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은 과거의 것이 아니다. " '과거' 를 소재로 한 '미래' 를 향한 '현재' 적 투쟁", 이것이 바로 '기억투쟁' 의 의의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과제를 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재화' 미래화 '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재 민주화운동을 '올바른 기억' 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제안되고 있다. 민주공원(민주화운동기념관 · 민주주의 센터, 민주화운동자료관 및 민주화운동 연구소 등을 포괄), 추모공원(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 조성작업), 민주화운동의 유적지 발굴 및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민주화운동 자료총서 발간 등 역사 정리, 6.10 항쟁 국가기념일 제정, 민주주의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출판, 민주화운동 정신 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체험수기 공모, 민주백일장 등),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기술의 교과서화 및 기존 역사기술 정정 작업, 전시회, 추모제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양한 기획행사들,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교육(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기여 연대활동(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지원 등) 등 많은 사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념사업들이 바로 민주화운동의 현재화와 미래화의 치열한 정신 속에서 그리고 기억투쟁의 일환으

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대한 바라는 4가지

민주진보진영의 기대를 실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바램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기억투쟁의 요체는 과거의 흔적을 역사적 유물로 만드는 것, 그를 통해 신세대들이 그것을 공간적 · 문화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기억의 '공간화' '문화화' 작업을 행하는 것이다.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던 이승복의 '반공정신' 을 전수하려는 집단은 '이승복 기념관' 을 통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지만, 평화와 종전(終戰)이 아니라 전쟁을 기념하는 '전쟁기념관' 이 있는 나라도 바로 우리 나라이다. 기억의 공간화 및 문화화 과정에서, 그 엄혹했던 시절, 용케도 살아남은 우리들, 혹은 비겁해서 살아남은 우리들은 "민주항쟁의 정신과 그 주역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어떻게 온전히 살려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당대의 최고의 미학적 수준에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짊어져야 한다. 가능한 문화적 · 미학적 상상력이 최대로 발휘되면서, 젊은 세대가 그것을 현재적인 것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공간들이 어느날 갑자기 역사적 · 문화적 의미를 가지면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예컨대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발굴하고 기념공간을 만드는 과정은, 흘러가 버린 역사적 현장을 '찾는' 과정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한물 간' 현장에 담겨있는 역사적 의미를 길어올리고 거기에 소중한 정신적 의미를 담고 공유(共有)해가는 일종의 '문화적 구성'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발굴하고 기념공간을 만드는 과정은, 흘러가 버린 역사적 현장을 '찾는' 과정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한물 간' 현장에 담겨있는 역사적 의미를 길어올리고 거기에 소중한 정신적 의미를 담고 공유(共有)해가는 일종의 '문화적 구성'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60 · 70 ·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당시 가졌던 그 헌신의 정신, 자기를 버리는 정신을 복원하고 전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이 마치 '논공행상' 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나타나기도 하고,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들(386세대 포함)의 정치권 진입과 그 이후의 행태 때문에 마치 권력적 야망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민주화운동 참여의 순수성을 희화화시키는 방식으로 80년대를 재현하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권력직에 오른 정치인들 조차도–당시의 암울했던 시기를 고려하여 본다면–출세주의적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시대정신이 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주된 동력이 되었다고 나는 해석한다. 단지 정치권에 뛰어든 이후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보였던 그 도덕성과 정신을 버리고 현실권력의 논리, 이익의 논리로 흡쓸려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민주화운동의 사후적인 분화행위–때로는 정략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가지고 80년대 당시의 민주화운동 참여의 이타적 정신 자체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거대한 민주주의 투쟁과 희생은 결코 386세대의 지도자나 양김, 기타 정치인들의 행위로만 환원될 수 없다. 신영복

선생이 표현한 것처럼 민주화운동은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고난 속으로 뛰어든 거대한 물결"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의 기본정신은 절박한 사회적 · 역사적 과제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희생의 정신, 이타적 에토스가 기본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민주화운동의 다시 부활시키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이타적 에토스로 부활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명문대 학생들이 자신의 학벌적 기득권을 버리고 노동자가 되고자 했던 바로 그 아름다운 정신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믿는다. 바로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현재의 삶 속으로 생환(生還)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부의 많은 민주진보운동과 그 단체들, 사람들과 함께 추진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민주화운동 기억의 현재화 · 미래화의 작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일로만 환원될 수 없다. 이미 준(準)국가적 기구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활동하기 때문에 '국가화'가 가져오는 딜레마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많이 느끼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부기구의 '예산편성'의 '관료주의적 왜곡'과 한계에 그대로 노출되어 활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부의 많은 민주진보운동과 그 단체들, 사람들과 함께 추진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운동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이루어진 무수한 희생 위에, 기념사업회에 종사하는 분들의 '직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점에서 지금도 찬바람 맞으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외부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의 헌신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떠받치는 힘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내부와 외부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 준(準)국가적 사업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현재의 권력과 싸우면서 해야 할 사업들은 사장(死藏)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는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계승은 독재와 권위주의의 유산(인적 · 제도적 유산들)과 싸우는 작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친독재인명사전을 만든다고 해보자. 이것은 구세력과의 격렬한 싸움을 즉각적으로 동반할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에 협력했던 인사들은 청산되지 않은 채, 심지어 '국민정부'에서까지 중용되고 있다. 어떤 점에서 우리들은 87년 6월항쟁 이후 너무 쉽게 독재의 유산과 싸우는 '현재적' 투쟁을 포기해버렸다고 할 수도 있다. 현재의 민중운동이나 시민운동이 그 작업을 내용적으로 계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독재와 연관된 직접적인 작업들을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독재와 유착되었던 사회적 세력들이나 인사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도 조성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관용하면서 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의 문제를 지금도 붙들고 싸우고 있고,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을

상기해보자. 무산된 '제2의 반민특위' 를 만드는 의미에서, 독재유산청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재인사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그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작업을 현재에 진행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 투쟁이 된다. 유신시대 및 전두환 시대의 장차관, 안기부 등 독재기구의 고위공직자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그들의 명예를 박탈하며, 최소한 역사적 단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총선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낙천낙선인사 선정에서 국보위나 광주학살, 기타 독재 이력이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되었다. 사실 이것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갖는 그룹들이 추진하고 시행해도 좋은 사업이었다. 이 낙천낙선운동에도 불구하고 독재인사들에 대한 폭넓은 단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이 민주화운동의 '진정한 현재화' 작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그런 한계성을 인식하고 민주화운동이 박제화(剝製化)된 기념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진행될 수 있어야 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내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인식을 투철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체가 하나의 조직이다. 따라서 모든 조직에 일반적으로 따라오는 많은 문제들, 예컨대 관료화, 경직화 등등의 문제가 동반되게 된다. 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는 '조직' 이 자신의 하는 '사업' 에 의해서만 의의를 두지 말고, 하나의 조직으로서-특별히 준(準)정부적 조직으로서-새로운 조직문화의 전범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들려온 이야기들은 실망스런 일도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화운동진영이 대체로 반(反)조직적 혹은 비(非)조직적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진통일 수도 있겠지만, 조직성원들이 기존의 행정조직이나 기업조직의 관료주의적 · 반인간주의적 병폐를 깊히 인식하고 대안적인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자세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관료조직에 '적응' 하기 보다는 기존의 관료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조직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기존의 조직 내부에서 보여지는 행태들을 새로운 조직운영과 조직문화의 대안적 전범을 통해 극복하는 조직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의 속한 조직의 문제나 내 자신의 행태를 객관화시켜 보기 위하여, 13년 후 내가 환갑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까 또한 지금하는 일이 그때까지 의미있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까 하고 생각해본다. 아마 대안적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은 대안적인 인식의 지평을 우리 모두가 갖는 것, 그리고 조직활동에서 개개인의 이해관계로부터 가능한 자유로워질 때-즉 사적인 데서부터 가능한 공적인 데로 이동하는 것에서-그나마 가능할 것이다. 아무쪼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의미있는 사업을 하는 조직일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조직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존의 관료조직에 '적응' 하기 보다는 기존의 관료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조직이 되기를 기대해본다